

# ‘차량은 없는데 유류비만’ 광주교육청 관용차는 유령차?



광주시교육청 관용차량.

구입하지도 않은 차량의 유류비 지출 기록이 남아 있는 등 광주시교육청 관용차량 현황 관리가 엉망이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관용차량은 10대, 지난해는 총 8대로 해당 차량들은 총무과에서 관리하

## 구입 이전·주행기록 없는데도 유류비 지출 기록 시교육청 “기록 작성자 실수...명확히 관리 할 것”

고 있다. 관용차량은 승합차와 승용차로 구성됐다. 이들 차량 중 차량번호 08수xxxx 승용차는 2019년 7월30일에 구입한 것으로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 차량의 유류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해 1월 7만2500원이 유류비로 사용됐다. 시가상 존재하

지도 않던 차량이 유류비를 사용한 것이다.

수상(?)한 기록은 이 뿐만이 아니다. 2017년 3월에 구입한 또다른 관용차(승용차)는 지난해 9월 주행기록이 전무하다. 하지만 관리 현황에는 500의 유류사용량과 6만4230원의 유류비 지출 내역이 기록돼 있다.

이 차량은 외부 주요 인사 의전용 차량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주행기록이 전무하다.

321가xxxx 차량은 2020년 2월 189km, 4월 30km, 5월 259km, 7월 65km, 8월 90km를 주행했다. 그러나 유류사용량은 ‘제로’였다.

또다른 차량은 지난해 6월 1538km, 7월 1646km를 주행했다. 유류사용량은 각각 3190, 2590였다. 유류비는 46만8110원과 33만8965원 이었다. 7월 주행거리가 6월보다 108km 많았지만, 유류사용량과 유류비는 오히려 6월보

다 적었다.

시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08수xxxx 번호의 관용차 기록은 작성자의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전용 차량은 돌발 상황에 대비, 미리 주유한 뒤 주유량과 결제 금액을 기입해 둔 것이다. 실제 소비했던 양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321가xxxx 차량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유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좀더 명확하고 꼼꼼하게 차량기록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선미기자

## 환경부 ‘시의원·NGO·언론 뼈라’

### 나주지역 주민들 “뿔이 구려서”

#### ‘침출수 의혹’ SRF 품질검사

정기 품질검사를 누락한 채 3년 넘게 묵은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 연료에서 ‘썩은 악취와 시커먼 침출수가 나온다’는 주민 민원제기로 시작된 ‘고형연료 공개품질 검사’를 앞두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단속해야 될 환경부가 투명한 검사 진행보다는 문제를 축소·은폐하려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환경부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주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공개 품질검사’ 방식 도입을 심도 있게 논의해 놓고도 사실상 일방적인 검사 진행 통보를 함으로써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에 전달된 주민 요구안은 ‘복수의 검사기관 선정·참여’, ‘복수의 주민대표·언론인 참관’ 등이었다.

13일 나주지역 주민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조협의회(광전노협)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2일 나주시에 ‘고형연료 품질확인 검사에 따른 주민참여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왔다.

이 공문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에 투입되는 ‘고형연료 품질 문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는 연료 품질 검사에 주민대표를 참관시킴으로써 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당일 공문을 발송하고 당일 안으로 ‘실제 나주에 거주

하는 주민 3명만 참관인으로 선정해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당정협약에서는 투명한 공개 품질검사를 약속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추진하고, 주민 참관인은 어떤 역할을 한다’는 핵심 내용은 공문에 명시도 하지 않았다.

또 주민 참관인 선정 시 구체적인 ‘자격제한 지침’까지 정해 일반적으로 통보해 불공정하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문제의 주민 참관인 선정 지침은 ‘시민단체(NGO)·언론인, 나주시의회·시청 관계자’는 제외하라는 부분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모양새 만 공개품질 검사다. 환경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참관인 자관을 제한하느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주민들은 “썩은 악취를 풍기는 시커먼 침출수 유출’ 의혹 민원이 제기된 고형연료 품질에 자신이 있으면, 어떤 요구의 방식이라도 환경부는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현재 나주지역 주민과 난방공사·환경부가 대척점에 있는 논란의 검사 대상 연료는 나주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장성 복합물류센터 노천 야적장에 방수포와 차광막을 씌운 채 3년 넘게 보관 중이다.

보관 중인 고형연료는 일부를 사용하고도 현재 3만이 넘는 양이 야적돼 있다. 서선욱기자



‘구호 외치는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민주광장에서 ‘쟁의행위 찬반 투표 83.2% 압도적 찬성 가결 전주공장위원회 쟁대위 출범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전공노 “전남도교육청 대규모 시설공사 전문성 없는 학교로 떠넘겨”

### 전국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 주장 “학교현장 업무 경감 정책에도 반해”

전남도교육청이 대규모 시설공사 사업 전문성이 없는 학교로 떠넘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는 13일 “최근 도교육청이 예산 관련 부서와 사업담당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사업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로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 불합격시설 재조성 사업을 넘겼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말 ‘2021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 불합격시설 재조성 사업비’를 104개 학교로 교부한다

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남교육청지부는 “학교현장 업무 경감 등 현장 중심 정책을 하면서 시설공사의 전문성도 없는 학교에 대규모 시설공사비를 교부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로 교부한 운동장 시설 사업비의 경우 학교별 업무가 비슷해 학교에 전출금으로 교부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일괄 계약해 추진하는 것이 예산면이나 인력운영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며 “104개 학교로 쪼개서

교부한 이면에도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학교현장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교육청지부는 “예산편성 심사 때 예산과 사업담당 주무관이 학교 현장 경험을 토대로 이 사업의 경우 대규모 시설공사로 전문성이 없는 단위 학교에서 집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일부 인사가 이를 묵살하고 우겨 대규모 시설공사가 계약과 감독의 전문성이 없는 학교로 떠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전남교육청지부는 “104개 학교 중에는 교부된 사업비가 해당 학교 전체 예산의 20%에 달하는 학교도 있다”며 “도교육청 사업부서의 업무추진 행태

가 학교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해당 인사는 “그 어떤 예산과 직원으로부터 단위 학교에서 집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들어 본 적이 없다. 당연히 그런 의견을 묵살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장 뿐만 아니라 트랙, 농구장 등 학교 별로 사업이 다양하다. 학교 실상을 잘 아는 해당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 사업 계획을 수립해 이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조치다. 학교가 입찰에 나서면 전문성을 보유한 업체들이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환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